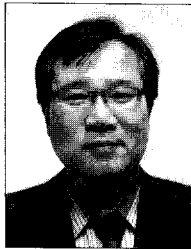


고통과 시련의 2011년, 변화와 발전의 2012년



조재준
낙농진흥회 사업부장

해마다 연초에는 새로운 계획과 포부를 갖고 떠오르는 태양을 맞이하듯 들뜬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 초유의 구제역 폭풍으로 인해 축산업계 전체적으로 암울하기만 한 새해를 맞이해야만 했다.

한해를 보내는 12월이 되면 지난 해를 되돌아보며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다는 표현을 상투적으로 쓰곤 한다. 올해는 연초 구제역 확산을 시작으로 백신접종, 원유공급 부족, 집유선 분쟁, 납유거부, 원유가격 협상, 한·EU FTA 발효, 낙농제도 개선 등 굵직굵직한 낙농현안들이 쉴 틈 없이 밀어 닥쳤다. 아마 낙농 역사 중 올해만큼 다양한 사건사고와 굵직한 현안들이 일시에 중첩되었던 적도 없었을 것이다.

시작부터 혼돈의 연속이었던 신묘년(辛卯年), 역경과 고난 속에 맞이한 변화의 조짐들

지난 해 11월에 시작되어 전국의 축산농가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구제역은 말 그대로 악몽 그 자체였다. 3백만 마리가 넘는 소와 돼지가 영문도 모른 채 차디찬 동토(凍土)에 파묻혀야 했고, 구제역 보상금으로 3조원이라는 혈세를 쏟아 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후 10여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구제역에 대한 악몽은 시나브로 잊혀져가고 있다.

그러나 구제역이 몰고 온 피해는 여전히 우리 주변을 맴돌며 끊임없는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 비근한 예로 구제역으로 목장의 소 전체를 살처분해야 했던 농가 대부분이 아직까지 원유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년 두 차례씩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인해 생산량 감소 및 유산·사산이 반복되는 등의 피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피해는 구제역 살처분에 의한 절대적인 원유량 감소다. 실제로 3만6천두의 젖소 살처분으로 인해 일평균 450톤의 원유생산기반이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낙농진흥회를 비롯한 모든 유업체가 절대적인 원유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원유부족 사태로 인해 낙농·유가공 각 분야에서 갖가지 대처방안들이 마련되었다.

우선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8일, 그간 유지해오던 생산감축정책 기조를 '성수기 수급안정을 위한 적정 생산량 유지정책'으로의 전환을 발표하며, 새로운 우유수급안정 대책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경우 2년간 한시적으로 버퍼(정상가격 지불물량)가 5% 증량될 뿐만 아니라, 유대정산 방식도 현행 15일마다 계산하던 쿼터적용 방식을 연간으로 계산하는 '연간총량쿼터제'로 전환되었다. 아울러 지난 7월부터는 낙농진흥회 농가를 대상으로 초과원유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지불함으로써 생산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한가지는 1991년 이후 20년 만에 실시된 '원유 유통질서 안정을 위한 행정명령'이다. 구제역 이동제한 해제 조치 이후 원유부족에 시달리던 일부 유업체를 중심으로 원유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목장 쟁탈전에 나섰다. 유업체들은 타유업체에 납유하고 있던 낙농가들에게 쿼터 무상지급, 원유대 외 웃돈 제공 등의 갖가지 당근책을 제공하는 등의 무리한 농가 쟁탈전을 계속되면서 낙농업계를 큰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급기야 정부에서는 7월 1일자로 '원유 유통질서 안정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기에 이르렀고, 다행히 그 이후 4개월여가 지난 11월 현재까지 추가적인 집유선 변경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

구제역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구제역이 창궐했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된 이동제한 조치는 적기에 실시되어야 할 인공수정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로 인해 한창 생산량이 증가되어야 할 시기인 건유우 증가로 10~11월의 유량이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분만 시기 이동으로 비수기에 접어드는 12~2월에 분만이 집중되어 매년 동절기에는 일시적인 수급불안정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가공유제품 생산을 위한 원유부족과 이로 인한 물가인상이 우려됨에 따라 할당관세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할당관세 품목은 전·탈지분유, 버터, 치즈, 생크림 등 음용용 유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제품을 대

상으로 하였다. 일반 유업체들 또한 다양한 증산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무엇보다 생산하는 원유 전량에 대해 정상가격을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입식자금 지원, 각종 시설·유질개선 자금의 지원 등은 원유가 남아돌아 각종 감축 대책을 추진하던 10년 전에 비하면 변해도 너무 변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올해의 가장 큰 변화는 역시 2008년 이후 3년 만에 실시된 원유가격 인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장장 57일 간의 협상기간을 거쳐 리터당 138원 수준의 인상으로 합의점을 찾기까지 전개된 생산자와 수요자 간의 협상방식은 과거 두 차례의 협상기간 동안 전개된 파행적인 방식과 별반 차이 없는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앞으로 원유가격을 매년 연동제로 개선하자는 대원칙에 생산자·수요자 모두의 동의를 이끌어 내었다. 매년 생산비 변동률에 따라 ‘원유가격 연동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원유가 협상이 가져온 큰 변화라고 보여진다. 원유가격 연동제는 2008년과 같이 합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어 원유가격 인상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낙농과 유업의 갈등을 말끔히 씻어내야 한다.

“생산기반 확보·
더이상 미룰 수 없
는 낙농제도 개선
을 통해 낙농의 역
사를 새롭게 써나
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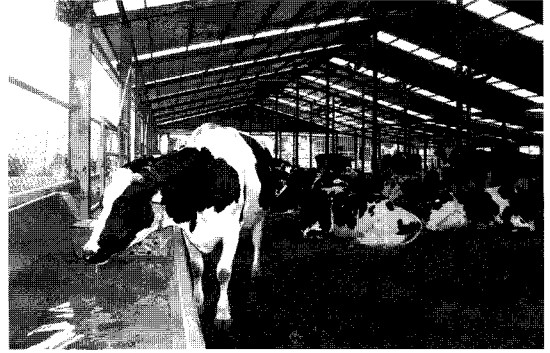
말 그대로 구제역으로 시작해 그 뒷수습을 하느라 정신 없었던 한해였지만, 행정명령 발동에 의한 집유선의 안정, 생산자와 수요자의 합의에 의한 원유가격 합의 등은 2011년의 낙농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대두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진년(壬辰年), 새롭게 써가는 낙농의 역사

2012년은 ‘임진년’ 용의 해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지 420년이 지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 민족이야말로 어떠한 외침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민족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올해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가면서 낙농·유가공산업 전반적으로 크나큰 시련과 고통을 남겨주었지만, 대부분의 낙농·유가공산업 종사자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기회와 반동의 기회로 삼아 새로운 낙농의 역사를 만들어 갈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혼란과 격동을 계기로 여러 부분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그러한 변화를 현실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 첫 번째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무너진 생산기반을 조속히 회복하는 것이다. 생산기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살처분 농가의 낙농 복귀와 적정 사육두수 확보다. 한때 살처분 농가를 중심으로 젖소 수입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답보 상태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국내 젖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 외엔 달리 대안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는 줄이는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의 사양관리와 함께 젖소의 경제수명 연장을 통한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젖소의 경제산차는 약 2.4산이다. 경제수명 연장은 육성우 비율을 감소시키므로 농가의 생산비에도 직접 관련이 되는 사항이다. 사육두수 중 착유우 비율이 47.5%로 착유우보다 육성우 비율이 높다보니 그만큼 생산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 낙농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규모화와 능률화를 통한 낙농생산성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인 2020년에는 착유우 비율을 47.5%→54.9%, 번식간격을 14개월→13개월, 경제수명(도태산차)을 2.9년→3.9년, 경제산차를 2.4산→3.4산으로 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각종 낙농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호당 사육두수를 현행 67.7두에서 91두 수준으로 확대하고 착유두수는 50두 이상으로 늘려, 호당 생산규모를 1.4톤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육규모 확대, 두당 생산성 향상, 감가상각비 절감, 사료비 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농가소득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축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정부의 ‘축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이다. 지난 구제역으로 정부, 축산농민, 국민 모두가 큰 흉역을 치루었다. 이에 정부는 축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5월 6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선진화 방안의 내용 중 당장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축산업 허가제의 경우 내년에 100두 이상 대규모 기업농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전업농(50두 이상), 2014년에는 준전업농(30두 이상), 2015년에는 소규모 농가(7두 이상)까지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되

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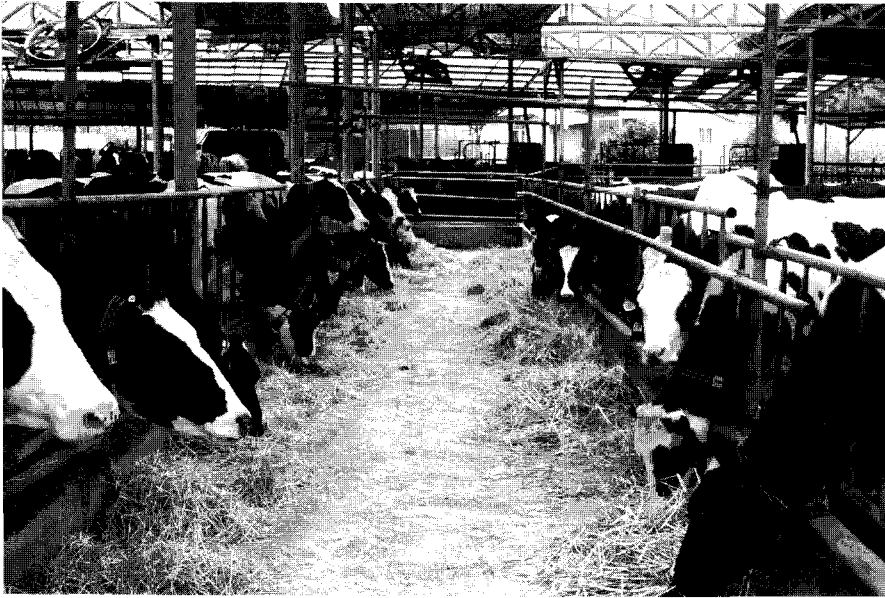
이외에 시설부문의 경우 방역시설, 소독시설, 축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사 축처리시설 등을 사육규모별로 허가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게 된다. 즉 허가를 받거나 갱신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허가기준 충족을 위한 축사시설 개보수 예산을 앞으로 10년간 약 1조 6천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허가제 실시로 준전업농 규모 농가중 일부는 전업농 규모인 50두 이상 규모로 발전할 것이고,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소규모와 일부 준전업농 규모의 폐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낙농정책은 전업농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준전업농의 전업화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뤄서는 안되는 부분으로 낙농제도의 개선이 있다. 지난 7월 1일 발효된 한·EU FTA를 비롯한 한·미 FTA, 그리고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와의 협상까지 감안한다면, 이제 우리의 낙농산업도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현재 정부주도로 FTA 이후 낙농생산기반 보호를 위해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다. FTA 이후 값싼 수입 유제품이 밀려오면 국내 낙농산업 규모는 시유와 원유를 꼭 사용해야 하는 일부 유제품을 제외하고는 수입산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즉, 현재 원유생산량의 90% 수준인 약 190만 톤으로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그래서 낙농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것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이다. FTA 이후 경쟁력이 상실되는 20만톤을 가공원료유로 유업체에 지원함으로써 낙농산업기반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현행 한 지방세 가족인 쿼터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전국쿼터제를 도입하여 통일된 원유 거래 원칙과 전국단위 수급조절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집유주체 소속 농가간의 형평성을 보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타협 없는 자기주장 보다는, 함께 하는 발전적 논의 이뤄져야

낙농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변화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정부, 생산자, 유업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각론에서의 의견대립으로 수년째 낙농발전종합대책이 표류하고 있다. 즉 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



지만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이른바 ‘동상이몽(同床異夢)’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생산자단체는 생산자위원회를 설치하여 생산자가 원유거래의 주체가 되기를 희망하고, 농협중앙회는 협동조합으로 집유를 일원화하여 공급의 독점권을 갖기를 원하고, 유가공단체는 생산자에 의한 공급독점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낙농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그동안의 제도개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는 논의’였다. 제도개선 논의과정에서 각 이해주체들이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하며 논리적으로 토론하기 보다는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마련이다. 그 때를 맞추면 수월하게 일을 마무리 할 수 있지만, 만약 때를 놓치면 몇 배의 고통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들어 주지도 않는 자기주장만을 되풀이 하는 해복은 논쟁을 반복하고 있기에는 이젠 더 이상 시간이 없다. 낙농과 유업은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이 어느 하나가 없으면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산업의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는 자세로 FTA 시대에서 낙농산업을 생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담보상 태인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을 다가오는 새해에는 반드시 완성하여 후대에게 물려 줄 건강한 낙농산업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다. ☺